

주간 통일정세

2015-32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표준시변경 유감 표명에 ‘발끈’...“용납못할 정치도발”(8/11,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1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가 평양시간을 새로 제정한 것을 시비질하다 못해 박근혜까지 직접 나서서 악담질을 한 것은 동족대결과 친일매국에 환장한 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증”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평양시 제정이 “일제에게 빼앗겼던 표준시간을 되찾고 민족사를 바로잡는 애국애족적인 조치”이자 “과학적 견지에서 볼 때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일제의 죄악을 결산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민족 반역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선전포고”...무자비한 군사보복 위협(8/1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조선반도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것은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조선반도 병탄을 목표로 한 기습적인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며 “동북아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함.
 - 그러면서 “미국과 괴뢰패당이 기어이 선불질을 한다면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은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선군조선의 본때를 단호히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북한군, 잇단 전단살포에 “남한 불바다 직면할수도” 위협(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전선연합부대들은 14일 공개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박두한 현 시점에서 박근혜 일당이 뼈라 살포와 같은 대대적인 심리전을 개시했다는 것은 북남관계가 사실상의 전쟁상태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남조선 괴뢰들은 너절한 뼈라 몇 장 때문에 통째로 불바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전선장병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남측에 거듭 경고함.
 - 공개담화는 또 “뼈라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고 심리전은 주되는 침략전쟁 수법의 하나”라면서 “군사분계선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공화국 뼈라와 불순전자매체의 대량살포는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공공연한 전쟁도발행위”라고 주장함.

- ‘DMZ 지뢰도발’ 북 “모략극” 남 “적반하장”…상호 경고·위협(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 20분께 정책국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400m 지점에 있는 괴뢰 헌병초소 앞에 자기방어를 위해 3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그러면서 “남조선 괴뢰들은 제 집안에서 불상사가 터지면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 드는 악습으로 체질화되어 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과 ‘무인기 발견’ 등을 그 예로 거론함.
 - 이어 이번 사건은 “박근혜 일당이 현 북남관계의 긴장상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반공화국뼈라 살포와 같은 동족대결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보려고 획책해 온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군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할 것”(8/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15일 ‘공개경고장’을 통해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는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며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군은 “재개한 대북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설치했거나 설치 중에 있는 고정 및 이동형의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모조리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전 전선에서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군사행동이 전면적으로 개시될 것”이라며 “그것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우리의 타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위협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측 ‘도발’ 언급은 적반하장의 극치”(8/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논평에서 남한을 향해 “자나깨나 우리를 침략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며 핵전쟁 위기만을 고조시켜온 극악무도한 도발자들이 무슨 체면에 코를 쳐들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나발질인가”라고 비난함.
 - 신문은 나아가 남한이 북한의 하반기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평화 파괴자, 전쟁 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고 북침 핵전쟁 도발 소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훈련을 “가장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북침 핵시험전쟁”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남조선 괴뢰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적이니 방어훈련이니 하며 저들의 군사적 도발 망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호전광들이 비단보자기를 백번 뒤집어써도 그 추악한 몸뚱이에서 풍기는 전쟁의 화약내는 감쌀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 “한미 화력훈련, 군사적 도발”...‘지뢰 도발’엔 침묵(8/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 최전연 일대에서 도발적인 북침 전쟁연습에 광분’이라는 논평에서 “호전광들은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이니 ‘격멸’ 가능한 확고한 대비태세’니 하며 전쟁열에 들뜬 망발들을 내뱉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조국해방 70돌에 즈음하여 민족의 자주평화 통일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분출되고 있는 때에 괴뢰역적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킬 도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판함.

- 북한, '대학병원 해킹' 부인...“참을 수 없는 모독”(8/1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또 다시 북 해킹설 유포, 무엇을 노린 것인가’라는 글에서 북한 해킹설이 “정보과학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마저 결여된 무지무식”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궤변”, “언어도단”, “생역지” 등의 표현으로 부인함.
 - 매체는 “고난도 해커들은 절대로 자기의 주소를 드러내지 않거나 모든 흔적을 남겨놓지 않는다”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무턱대고 ‘북 소행’으로 몰아대는 것은 괴뢰들의 변함없는 악습”이라고 비난함.
 - 매체는 북한 해킹설이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8.15해방 일흔 돌을 맞으며 고조되는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 공동행사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보려는 간교한 흉심”이라고 비판함.

- 북한, 박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맹비난...“값비싼 대가 치를 것”(8/1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6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15일 그 무슨 '8.15 경축사'라는데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악담을 늘어놓아 만사람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반응함.
 - 대변인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기 어려운 사상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만고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숙청 강행’이니, ‘도발 위협’이니 하며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망발을 쫓아냈다”고 비난함.
 - 그는 이어 “박근혜는 어떤 요설로도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를 걸고든 악담질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특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무엄한 험담질을 거리낌 없이 해댄 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며 극단한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라고 단정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군, 박근혜 대통령 사진 과녁 만들어 실탄 사격(8/13,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가 12일 오후 방영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신천박물관 참관·복수 결의 모임 진행’ 소식 영상에 군인들의 실탄 사격에 등장하는 5명의 과녁 중 정중앙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 있는 장면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TV는 이 과녁들을 공개하고서 군인들이 과녁을 향해 권총과 기관총으로 실탄 사격을 하는 장면도 연달아 내보냈으며, 영상에 등장한 군인들은 삼지연에서부터 판문점까지 달리는 ‘붉은기 이어달리기’ 행사에 참가한 군인들이라고 보도함.
 - TV는 행사에 참가 중인 군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만행을 전시했다는 황해남도 신천박물관을 방문해 복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모임과 실탄 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하고, 이어 “실탄 한발한발에 신천의 복수를 재우고 신천의 피값을 재우며 최후 결전의 그날 미제 침략자들을 백두산 총대로 무자비하게 불마당질 해버릴 보복 의지를 안고 멸적의 충성을 높이 올렸다”며 험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출입경 평양시 맞춰야” 통보…내일 적용(8/1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는 16일 “북한은 어제 오전 서해 군통신을 통해 ‘15일부터 남북 군통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새로 제정된 시간에 맞추어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근무자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생산활동이 현지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 남북한의 표준시 적용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경 시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원활한 출입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탈북단체 진단살포에 “무자비한 조준 사격할 것”(8/1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3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빼리살포 난동이 시작

됨과 동시에 우리의 조준격과사격이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며 도발의 거점들이 형체도 없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함.

-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전에 경고하고 선포한대로 반공화국 뼈라살포 망동을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괴뢰패당은 ‘표현의 자유’니, ‘자율적 행동’이니 뭐니 하며 인간 쓰레기들의 뼈라살포를 목인조장하는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제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남한 정부의 ‘체제통일 추구(통일준비위원회·신뢰프로세스 등)로 “북남대결이 격화되고 자주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및 ‘체제통일 기도 중단 및 연방제통일’ 주장(8.10, 중앙통신·노동신문)

- 통일 이후를 대비한 ‘관련법 정비’등 관련 ‘저들의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화국 북반부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닦자는 것’이라며 ‘괴뢰당국의 대화타령은 반공화국압살계책을 가리우기 위한 꾀변’이라고 일축(8.12,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외무성 “한미군사훈련 즉시 취소하라”(8/13,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한해에도 몇 차례씩 끊임없이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같이 요구함.
 -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군사적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부정적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도 점령을 노리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 장비들까지 동원돼 실전의 분위기 속에 감행되는 군사연습”이라며 “절대로 방어적일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강행시 군사 대응 거세질 것”(8/15,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핵위협과 공갈을 비롯해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적대적인 위협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당면해 침략적인 을지프리덤가

- 디언 합동군사연습부터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 대변인은 “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최대로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우리 공화국은 핵 억제력을 비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대적인 최첨단 공격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최강국”이라며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면 우리의 초강경 반미 대응 전에 직면한 미국 본토의 안전이 보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일본은 역사왜곡 놀음 걷어치우라” 비난(8/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극도에 이른 역사왜곡 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일본 반동들이 과거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일제가 수십년 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재부들을 약탈했으며 가혹한 노예살이를 강요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며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일본 반동들은 과거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역사 왜곡 놀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그것은 전범국의 오명을 더 부각시켜 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어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며 “일본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자면 역사 왜곡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함.
- 북한 “미국 테러 책동으로 세계정세 점점 불안”(8/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세계적인 우려거리-이주민 문제’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뿌린 불화의 씨앗이 세계 각지에서 피비린내나는 전쟁과 분쟁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함.
 - 특히 신문은 “이주민 문제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우려거리로 된 것은 바로 미국이 테러를 조장시키고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북한은 “미국이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 목적은 해당 나라 인민들을 분열 대립시켜 놓고 통치함으로써 그 나라들에서 저들의 정치경제적 목적과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비난함.

- 북한, 'DMZ 도발' 사과없이 미국에 "대화 환경 마련하라"(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화가 없이 긴장만 격화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특히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올해 초에도 우리는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중지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돼있다는 도량을 보여줬다"고 강조함.
 - 신문은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에 전쟁연습강행으로 도전해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은 또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면서 핵 포기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한, 중국 우회 비난... "남북 사이서 이익 차리는 외세"(8/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선의 자주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변영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기념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보도함.
 - 연구소는 "말로는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북남 사이에서 때에 따라 이편도 들고 저편도 드는 식으로 자기 안속(이익)을 차리는 외세도 있다"며 중국을 에둘러 비판하고 "남조선의 일방적인 '제도통일론'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외세"라면서 미국을 겨냥한 뒤 "북남 사이에 합의됐던 통일 방식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외세도 있다"며 중국으로도 화살을 돌림.

- 보고서는 이어 “지금 남조선당국이 '통일외교'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 외세를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벌리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경고함.

바. 대일본

- 북한,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 강력 규탄(8/14, 연합뉴스, 조선신보)
 -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4일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백서를 발표하고 “일본이 형식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애호국가’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해외 침략의 길로 나아가려는 책동을 국제사회 앞에 폭로 단죄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백서는 “일본 반동들의 경거망동은 우리가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다져온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일본이 개악된 국내법을 발동해 우리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한다면 만회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의 계성훈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일본은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과에 대해 사죄, 배상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며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함.
- 북한 외무성 “아베 담화, 침략역사 인정과 사죄 없다”(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담화를 통해 “아베의 ‘전후 70돌 담화’에는 침략 역사에 대한 인정과 사죄가 담겨 있지 않다”며 “죄악에 찬 과거를 가리워보려는 일본 우익 보수세력의 시도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통치는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것이었다”며 “이러한 일본이 한마디 사죄나 반성도 없이 그 무슨 미래와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공헌을 운운하는 것은 조선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함.
 - 특히 “일본이 패망 후에도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추종해 조선전쟁에 가담하고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반공화국 적대시책동에 광분하여왔다”고 비난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북한 김영남, ‘물난리’ 미얀마에 위로 전문(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물난리로 큰 피해를 본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폭우로 큰물 피해가 발생해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했다”며 “당신(테인 세인 대통령)과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고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어 “당신과 귀국 정부가 자연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피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14년간 독일 장학연수 다녀간 북한 연구원 112명”(8/14, 자유아시아방송)
 - 2000년대 초반 이후 총 112명에 달하는 북한 연구원이 독일에서 장학금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독일학술교류처 자료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독일학술교류처 관계자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로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연구원은 장학금 수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석박사 연구원이 아닌 학부생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생 10명이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와는 별도로 북한 산림학 연구원 2명이 현재 독일의 민간단체 한스자이델재단의 지원으로 독일에서 연구 중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 日 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장 발언(하라다 요시아키, '조선반도 출신자의 징용은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 안됨') 등은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들을 덮어버리려는 철면피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일본의 역사왜곡놀음" 비난(8.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의 지난 4년간 亞-太재균형전략의 본질은 "무력증강의 군사적 대결전략이었다"며 이에 대한 '방위력 백방강화 당위성' 강조(8.10, 평양방송)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에서의 총기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악성증양으로 되고 있다'며 미국은 '총기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온갖 사회악이 살판 치는 범죄의 서식장'이라고 비난(8.11, 중앙통신·민주조선)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8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 방문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은위페 알렉산더)와 담화(8.11, 중앙통신)
-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단장: 팜 싸오 마이 국장), 8월 12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8.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석주(당중앙위 비서), 8월 13일 시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대표단과 담화(8.13,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해군 참모총장 지명자의 상원 군사촉 인준청문회 발언을 "저들의 무력증강 책동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8.1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브루나이 다루살람 공식방문 北 정부대표 단장), 8월 12일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모하메드 볼키아흐)과 회담 및 연회(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 주최) 참석(8.14,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8월 14일 민족통일대회 참가 해외동포 대표단장들(박구호 「총련」 부의장 등)과 담화(8.14, 중앙통신)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8월 14일 러시아 평의회 대표단(단장 : 예프게니 부시민 상원 부의장)과 담화(8.14, 중앙통신)
- 김영남, 8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러시아 평의회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8.15,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종자농장 시찰...사료작물에 '애국풀' 명명(8/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종자연구농장인 제810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경작지에 재배 중인 사료풀을 살펴보고 만족을 표시했고 이어 "영양가와 수확량이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에 대한 시험재배에 성공한 것은 자랑 할 만한 성과"라면서 사료풀의 이름을 '애국풀'이라고 명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해당 작물은 오리새나 자주꽃자리풀과 같이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료작물에 비해

수확량이 몇 배나 높다고 소개하고 김 제1위원장의 현지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오수용 당 비서, 서홍찬 상장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광복 70주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8/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70돌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이들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고 보도함.
 - 이어 “참가자들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조국해방 업적, 조국건설 업적을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 조국을 통일되고 강성변영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바칠 맹세를 다짐했다”며 분위기를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김정은,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총살 처형”(8/12, 연합뉴스)
 -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12일 최영건 부총리가 지난 5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정책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총살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또 작년 9월에는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던 김근섭도 공개 총살 형식으로 처형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주도한 수사에 부패 혐의가 적발돼 다른 지방 고위간부들과 함께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광복 70주년 맞아 민족통일대회 등 경축행사 개최(8/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백두산에서 성대히 개막된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폐막됐다”고 전함.

- 대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명예공동위원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위원장인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해외 동포와 근로자 등이 참가함.
- 13일 백두산에서 개막한 이 대회는 자주통일을 위한 대행진, 김일성 주석의 고향집 참관에 이어 14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등의 순서로 진행됨.
- 폐막식에서 대회 주최 측은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 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대결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자"며 선동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세계 유일 백두산대국”…광복 70주년 자화자찬(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위대한 조국을 노래하노라 - 조국해방 70돐에 삼가 이 글을 드린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조선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백두산대국”이라고 역설하고 백두산대국의 의미를 자주로 정의하면서 북한을 “사상에서 대국, 자존심에서 대국, 지구상의 어떤 강적과도 맞서 대세를 평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대국”이라고 자평함.
 - 정론은 이어 백두산대국은 3대 세습을 거치며 이룩된 것이며, 지난 70년 혁명하던 나라들에서 국가가 붕괴되는 등 ‘재난’과 ‘참변’을 겪은 것은 ‘수령의 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며 북한 3대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3년에 우리 조국은 일 년에 10년씩 비약하며 30년을 자랐다”며 김 제1위원장의 치적을 치켜세움.
- 북한, 광복절 맞아 체제 선전…‘백두혈통’ 띄우기(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1면 전면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김일성 주석의

- 사진과 함께 사설 ‘위대한 백두산대국을 천만년 길이 빛내어나가자’를 실고 “8월 15일은 파란 많은 민족 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 개척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의의 깊은 날”이라고 강조함.
- 또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사상과 업적으로 존엄 높고 강위력한 백두산 대국”이라고 선전하며 ‘백두혈통’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김일성 동지는 강도 일제를 때려 부수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민족 재생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동지는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아버지 수령님의 혁명 위업 계승 완선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웠다”며 김일성 부자를 찬양함.
 - 이어 “사상과 이념도, 영도 품모와 혁명 방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원수님, 김정은 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 제일 강국으로 빛내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 ‘띄우기’에도 나섬.

- 김정은 黨 제1비서, 8월 10일 리설주와 함께 ‘2015 동아시아안컵’ 우승 여자축구 선수들 귀환 평양국제비행장 마중 및 ‘기념사진 촬영·감사 전달’ 치하(8.10,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8월 11일 이집트 방문 후 귀환(8.11,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에 다양한 보험상품 등장…휴대전화 과수보험까지(8/12, 연합뉴스)
 -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2일 홈페이지에서 지난 2월 말 평양에서 열린 각 도지사 연차 총회에서 휴대전화보험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힌 내용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총회사는 “회의에서 지난해 평양시,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도지사들에서 손전화기(휴대전화) 보험을 비롯한 새로운 업종들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자 수와 보험대상 수를 늘려 보험료 수입액을 높인 데 대해 평가됐다”고 전함.
 - 또 이 회사가 내세운 과수보험의 담보는 과일나무와 과일이며 담보보험은 과일 나무인 경우 가뭄·산사태·화재, 과일인 경우 우박·가뭄·과습·고열·화재, 과일의 품질일 경우 우박·폭우·폭풍위험 등이 해당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황금의삼각주은행, 선불카드 ‘선봉’ 발행(8/12, 노스코리언 이코노미 위치)
 - 북한의 황금의삼각주은행이 전자결제카드 ‘선봉’을 발행했다고 북한경제 전문

-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언 이코노미 위치’가 12일 보도함.
- 이 사이트는 선봉 카드의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이전에 출시한 ‘나래’나 ‘고려’ 카드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며 선봉 카드는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와는 다른 선불카드라고 전함.
 - 또 선봉 카드에는 신용카드 국제규격인 EMV(Europay Master Visa) 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이 카드는 나선 경제특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태국 외무장관, 경제협력·친선 증진 논의(8/10, 연합뉴스)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과 따나삭 빠띠마프라곤 태국 외무장관은 10일 오후 만나 양국 사이의 투자, 농업기술, 관광 등 경제 협력 강화와 친선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이와 함께 태국 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쌀 수출 미수금 지급, 북한에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자국 여성의 행방 확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뉴스는 전함.
- 리수용 북한 외무상, 태국서 외자유치 외교전(8/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태국 외교부를 인용해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주요 산업단지를 둘러보는가 하면 태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북 투자를 요청했다고 보도함.
 - 리수용 외무상은 태국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또 방문 기간 방콕 동남부에 있는 주요 산업 시설인 아마타 나콘 공단과 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새우 양식 및 관련 식품 가공공장도 방문했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홍수 피해 북한에 20억원 긴급 투입키로(8/12, 미국의소리)
 - 유엔이 가뭄과 홍수 등 재난 피해를 입은 북한에 175만달러(약 20억5천만원)의 긴급구호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최근 ‘국제사회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 재난 피해 지원 목적으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약 1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약 4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함.

- 유엔, 가뭄·홍수 이중고 북한에 630만달러 긴급지원(8/13, 미국의소리)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가뭄에 이어 홍수 피해를 본 북한에 630만 달러(약 75억원)를 긴급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유니세프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긴급자금은 가뭄뿐 아니라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함.

- 북한, 외자유치 ‘총력전’…중국과 합작사도 설립(8/15, 미국의소리,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북한이 중국 투자회사인 '중테뉘징(中鐵多經)투자그룹'과 합작투자회사인 '희망투자그룹'을 홍콩에 설립했다고 보도함.
 - 희망투자그룹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며 12개 개발 대상 분야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나선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 나진항, 동해안 고속철도, 발전소, 정유공장 보수 등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 석탄·철광석 등 광물과 희토류 자원 개발, 금융서비스, 농업 등이 포함됨.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다음달 21~24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11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열기로 하고 해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함.
 - 외국인 참가자를 모집 중인 영국의 백두문화교류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에게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주선한다고 강조함.

- 평양시의 원림녹화사업 성과(평양민속공원 등 대상 총 50여만 그루 식수 등) 및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건설장에서 8월 9일 “14만산 대발파 성과적” 진행 보도(8.10, 중앙방송·평양방송)
- 평양시, 평양민속공원 등 원림녹화사업 추진(8.13,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일본에 유괴됐던 북송교포 여성 귀환”(8/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일본으로 유괴되었던 재일귀국공민(북송교포) 도영숙 여성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보도 내용 출처에 대해 “해당 기관의 통보”라고 설명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이달 초 폭우 피해...“29명 사망·실종”(8/11, 조선중앙통신, 미국의소리)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황해남도에서 8월 초 폭우와 해일로 해안방조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살림집들과 도로, 철도, 다리 등이 침수되거나 못 쓰게 됐다”고 전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농경지들이 침수, 유실돼 알곡 수확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함.

- 박봉주 총리가 황해남도 해주시, 벽성군, 신원군 등을 돌아보며 피해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지에서 소집된 협의회에서는 피해 복구 사업 진행을 위한 토의가 있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1일 북한 재난관리부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달 초 북한 홍수로 2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했다고 밝힌 내용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재난관리부는 지난 1~5일 닷새간 이어진 폭우로 주민 3천400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으며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고 농경지 4천ha도 유실됐다고 매체는 전함.
- “10월 세계 태권도인 남북한 종단에 41명 참가신청”(8/11, 미국의 소리)
 - 각국 태권도인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북한을 종단하는 행사에 전세계 태권도인 41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이번 행사를 기획한 미국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는 “동참 의사를 밝힌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출신 태권도인 41명 명단을 남북한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10월3일 평양을 방문해 3박4일간 스포츠 교류 활동을 한 뒤 6일 군사분계선을 통해 서울로 넘어올 예정이라고 전함.
 - 매체는 북한 당국에는 뉴욕 유엔대표부를 통해 명단을 접수했으며 정 대표는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행사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도 정 대표에게 행사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북한, 광복 70주년 맞아 내일부터 ‘민족통일대회’ 개최(8/1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13일 백두산에서 ‘자주통일 대행진’ 출정식을 거행하면서 막을 올린후 평양과 판문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주통일 결의대회’ 등 의 행사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재일본조선인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단, 재캐나다 조선인연합회대표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대표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대표단 등 해외동포 대표단들이 대회 참석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북한 광복70주년 나홀로 경축 분주…체제 선전도 강화(8/13, 연합뉴스)
 - 13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하여 보도함.
 - 백두산에서 ‘자주통일 대행진’ 출정식을 시작으로 평양과 관문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주통일 결의대회’ 등 행사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며 중앙미술전시회가 12일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열렸고 같은 날 ‘조국해방 70돌 경축’ 등 문구가 적힌 새 우표도 발행됐다고 뉴스는 북한매체를 인용하여 보도함.

- 북한, 여자축구 우승 연일 축하연…“체제결속 의도”(8/13, 노동신문)
 - 13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평양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여자축구선수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함.
 - 군중집회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각계층 환영 인파가 모여 여자축구 선수들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박수 갈채를 보내며 영웅 대접을 함.
 - 최 당비서는 축하 연설에서 동아시아안팎에서 맹활약한 라은심 등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김정은 시대 체육 전사들의 백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 한 번 과시하였다”고 강조함.

- 북한, 곡창지대 황해남도 홍수피해 복구에 총력전(8/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인민군 군인들이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황해남도로 달려와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복구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군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치켜세움.
 - 방송은 또 “군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한 데 맞게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해안방조제 복구 전투에 일제히 진입했다”며 파괴된 주택과 다리, 도로, 철도 보수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전함.
 - 또 지역 주민들과 협동농장들이 힘을 합쳐 논과 밭에 고인 물을 퍼내는 등 도내 모든 기관·기업소가 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임.

- 북한, 체육 전문TV 신설…‘체육강국’ 일환(8/1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4일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뜻깊은 날인 8월 15일부터 체육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도하고, 방송 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라고 전함.

- TV는 “우리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체육 텔레비전 방송이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체육 열풍을 일으키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북한, 동아시아컵 우승 여자축구팀에 표창(8/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아컵)에서 우승한 여자 축구선수와 감독들에게 ‘인민체육인’ 칭호 등 각종 표창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12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인민체육인·공훈체육인 칭호, 국기훈장 제2급 등이 선수와 감독들에게 주어졌다고 전함.
- 북한, 오늘부터 ‘평양시’…타종행사로 새 표준시 시작 알려(8/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남한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로 15일 0시 정각에 0시를 알리는 시계 화면, 종소리와 함께 “평양시간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위대한 역사는 주체혁명 위업 최후 승리를 향해 장엄히 흐를 것”이라고 방송함.
 - 그러면서 평양시 중심부인 중구역 대동문의 연광정에서 청색 저고리에 흰색 한복 바지를 입은 남성 2명이 평양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을 치는 타종의 식 장면, 선박과 기차가 뱃고동과 기적을 울리는 장면을 내보냄.
 - TV는 “일제의 100년 죄악을 결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제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흔적도 없이 청산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영원토록 떨쳐나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전문가, “북한, 최근 10년간 우리늄 생산 강화”(8/13, 연합뉴스)
 - 북한이 2006년 이후 약 10년간 황해도 평산의 우리늄 광산에서 생산 활동을 크게 강화해 왔다는 분석이 나옴.
 - 美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북한이 이곳에서 우리늄 채굴과 가공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루이스 연구원은 평산 광산과 부근을 2003년과 2006년, 2011년에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의 변화를 토대로 이런 움직임을 분석했는데, 그는 “폐기물의 양을 토대로 북한이 생산한 우리늄의 양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며 “연료용이든 무기용이든 북한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우리늄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말함.
- 이란, 북한에 비밀 핵개발 의존 가능성(8/14, 연합뉴스)
 - 미국 등 주요국과의 핵협상에 따라 기존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없게 된 이란이 앞으로의 핵개발 과정 중 일부를 북한에 의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美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정책회의(AFPC)의 중동문제 전문가 일란 버먼은 북한과 이란이 2013년까지도 핵무기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해 왔다는 의혹을 받는 등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지적함.
 - 이어 그는 이번 핵협상으로 이란이 약 1천억 달러(약 117조 원)의 수익을 얻을 전망이고, 이란이 이 중 일부를 비밀 핵개발에 쓰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화가 부족한 북한과 이란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풀이함.

나. 미·북 관계

- 美국무부, “북한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 공식 규탄(8/12, 연합뉴스)
 - 美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경기도 파주 인근의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은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의 위반”이라고 공식 규탄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유엔 사령부 특별조사단은 북한 인민군이 한국군의 순찰루트에 지뢰를 매설해놓음으로써 정전협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는 유엔군 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힘.
- 앞서, 윌리엄 어번 美국방부 대변인도 10일 브리핑에서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번 행위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general officer level-dialog)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日정부, “아베 총리 방북계획 없다”...방북설 보도 부인(8/11,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하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전격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계획)은 없다”며 부인함.
 - 스가 장관은 이어 교착상태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위해 아베 총리가 방북하는 것도 선택지로서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베 내각에게 납치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전력(全力)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에 지적한(보도된) 것과 같은 일은 없다”고 덧붙임.
 - 앞서 한국의 한 방송사는 북일 당국자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위한 극비 사전접촉을 가졌다고 전하고, 아베 총리가 이달 말 방북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음.
- 北, 日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 강력 규탄(8/14, 연합뉴스)
 - 북한은 아베 정부가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오히려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마저 개정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함.
 - 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이날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백서를 발표하고 “일본이 형식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애호국가’의 허울마저 벗어 던지고 해외 침략의 길로 나아가려는 책동을 국제사회 앞에 폭로 단죄한다”고 밝힘.

- 이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해 침략의 길을 또다시 걷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고 우려함.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압력 커질 것(8/10, 연합뉴스)
 - 美 플래처스쿨의 ‘안보리뷰’ 선임 편집인인 리언 화이트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2011년 통과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심각한 예산감축 상황을 계속 겪는다면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협상이 논쟁적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국방예산이 크게 줄어든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과 재배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며, “일본과 같은 국가는 미군의 주둔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 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양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며 “의회는 미국이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제공하는 안보의 수준을 감안해볼 때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美, “박대통령, 중국 전승행사 참석은 주권적 결정사항”(8/11, 연합뉴스)
 - 美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며,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도 참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함.

- 이는 이번 행사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으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를 자제하려는 포석도 깔려있음.
- 다만, 미국 정부로서는 전승 기념행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행사와 연계된 ‘열병식’을 통해 패권을 과시하거나 한·미·일 3국 사이의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임.

■ 테드 포 하원의원, “韓美원자력협정 중요·박 대통령 조기방미 희망”(8/12, 연합뉴스)

- 테드 포 美 연방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지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방미를 희망함.
- 포 의원은 이날 정치전문지 ‘롤 콜’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의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졌고, 이후 60년 이상 계속 강화돼 왔다”며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양국의 관계가 경제와 원자력 분야는 물론, 보건과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함.
- 그는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한미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을 더 번창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계속 진화 중인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 韓美연합사령관, 지뢰폭발 부상자 문병…“진정한 영웅”(8/12, 연합뉴스)

- 커티스 스캐퍼로티 韓美연합사령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중상을 당한 부사관 2명을 문병했는데, 현직 韓美연합사령관이 우리 군 부상 장병을 친히 문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최 의장과 함께 이번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한 김정원(23) 하사가 입원 중인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하함.
- 군 관계자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김 하사와 하 하사를 문병한 데 대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朴대통령, 10월16일 방미...오바마와 네번째 정상회담(8/1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美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월16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평상시 20여 일 정도를 앞두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2개월이나 일찍 발표한 것은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배려한 차원이라는 분석임.

- **케리 美국무장관, “광복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8/14, 연합뉴스)**
 -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를 전하고 싶다”는 경축 성명을 냈.
 - 케리 장관은 “광복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지역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요인이기도 한 안보 동맹과 굳건한 경제 협력이라는 두 개의 기반을 바탕으로 강하고 영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 “미국은 광복절을 경축하는 한국과 함께 서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한 그는 “전 세계의 모든 한국인이 기쁜 광복절을 맞기를 바라고, 두 나라 사이의 더 깊은 우의를 다져갈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美하원 외교위원장, “독도는 한국 땅” 공식 문서로 남겨(8/14,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만들었는데, 이는 지난 5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재미한인지도자 대회에서 했던 발언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미국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말한 것을 공식 문서로 남긴 것은 처음임.
 - 로이스 위원장은 이 문서에서 “하원 외교 위원장으로서 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언급했다(As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 noted that Dokdo Island is South Korean territory.)”고 적음.
 - 특히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여서, 로이스 위원장의 공식 문서는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 韓美, UFG 연습 17~28일 실시…北에 일정 통보(8/15, 연합뉴스)
 - 韓美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韓美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 측에 UFG 연습 일정을 통보함.
 - 연합사는 “UFG 연습은 다른 모든 연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방호와 대비태세 향상을 위해 계획됐다”면서 “이번 연습도 수개월에 걸쳐 계획됐다”고 설명함.
 -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도 예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한 3만여 명이 훈련에 참가하며, 한국군은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오바마 대통령·시진핑 주석, 차대통령에 광복절 축전…“한국, 전세계 모범”(8/15,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17개국 정상들이 제70주년 광복절을 즈음해 축하 전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냄.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보낸 축전에서 “한국은 아태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모범이며 국경을 초월하는 중대 도전과제 해결에도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런 업적은 한국 국민의 뛰어난 근면과 의지의 징표이며, 한국 국민은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평가함.
 -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면서 “양 국민 간 상호존중 및 우의는 한·미 동맹을 지탱하고 강화하는 핵심이며, 양국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와 가치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미래를 건설하는데 지침이 된다”고 말함.
 - 시 주석은 지난 11일 발송한 축전에서 “본인은 한·중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국과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보낸 축전에서 “양국 관계는 우호적이고 건설적이며 모든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및 지역·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런 협력은 두 나라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청와대, “차대통령, 中전승절 행사 참석 신중 검토”(8/10, 연합뉴스)
 - 청와대는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과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힘.
 - 민경욱 대변인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요청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고 설명함.

- 中관영매체, “중국 일반인은 박대통령 열병식 참석 기대”(8/10, 연합뉴스)
 - 中 관영언론은 박대통령의 참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미국이 박대통령의 불참을 요구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를 거론하며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비난함.
 -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박근혜 대통령 등 외국 정상의 중국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해 “일본이 중국보다 더 초조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교도통신의 ‘사실이 아닌 보도’는 일본이 박 대통령의 9월 3일 방중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함.
 - 중국은 韓·中 양국의 항일전쟁 과정에서의 환난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열병식에 관심을 둔 일반 중국인은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함.

- FT, “같은 역사 놓고 민족주의 해석 다른 한·중·일”(8/1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똑같이 겪은 역사를 제각각 다르게 해석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등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자세히 보도함.
 - FT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사과하기는 커녕, 역사를 왜곡한다”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13세 학생의 발언과 “일본 마귀들이 최악”이라고 중년 남성이 딸에게 하는 말로 중국인의 정서를 전함.
 - FT는 한국이 19세기 말 강대국의 침략에 이어 지배를 받은 ‘아시아의 폴란드’와

같았다고 소개한 다음 한국은 일본이 “과거 잘못 재확인하고 (뉘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일본인들은 중국과 한국의 그칠 줄 모르는 비난에 일본인들은 지겨워한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젊은 일본 세대는 일본이 증조부 대의 잘못으로 계속 헐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고 전함.

■ 中, 남북한 교역액 차이 45배…한국은 3대 무역국(8/16, 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2천905억 달러(341조원)로 제3위의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파악된 한편, 북한과의 교역액은 64억달러(7조5천억원) 수준으로 한국의 45분의 1에 불과함.
-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 무역액이 총 7천120억3천200만 달러로 중국 대외무역의 17%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 이중 일본과 무역액이 3천124억8천400만 달러(367조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2천905억6천300만 달러, 러시아와 952억8천500만 달러, 몽골 73억 달러, 북한 63억8천800만 달러 순이었음.
- 대중 투자국 순위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각각 2, 3위였던 반면, 북한과 몽골,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의 투자액이 훨씬 많았는데, 중국은 북한에 1천8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북한이 중국에 투자한 액은 29만 달러에 불과함.

다. 한·일 관계

■ 무라야마 전 총리, “아베 담화에 ‘사죄’없으면 이웃나라가 의심”(8/10, 연합뉴스)

-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침략은 역사적 사실로, 잘못된 일을 사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베 담화’에 사죄의 표현이 없으면 “이웃국가들 사이에 다시 의심을 낳는다”고 말함.
-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아시아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고 자신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발표 배경을 언급했으며, “담화를 계기로 중국,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함.
- 또한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한 강한 피해 의식은 있지만, 전쟁 책임이나 가해자의 의식은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 스스로 전쟁 범죄자를 재판한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함.

- 日정부, “아베담화 한국어 등 번역본 발표 검토”(8/10, 연합뉴스, 오후 3시)
 - 日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의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담화의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번역본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아베 담화에 ‘사죄’, ‘침략’ 등 단어를 포함할지에 대해 “총리가 판단할 것”이라며 “코멘트를 자제하겠다”고 말함.

- 아베 담화 ‘사죄’ 포함 전망 잇따라…“과거담화 인용 형식”(8/11, 연합뉴스)
 -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를 넣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죄’를 넣더라도 과거 담화를 인용하거나, 일본의 ‘침략’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도 담화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확인했으며, 다만 일본의 행위에 국한하는 의미가 아니라 침략 등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 원칙을 앞으로도 준수하겠다는 문맥에서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함.
 -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앞선 큰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평가하고 앞선 담화와 마찬가지로 ‘침략’이라는 표현을 명기할 것이라며 이웃 국가들이 일본이 사죄하고 있다고 느낄만한 표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된다고 전함.
 - 니혼케이자이 신문과 도쿄신문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국제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사죄 표현은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이 같은 구상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핵심 단어’ 반영 요구와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됨.

- 日 오사카시, ‘위안부문제, 일본군만 비난하지 말라’ 서한 추진(8/11,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자매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예정인 데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달 중에 발송할 계획임.
 -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의사에 따라 발송될 이 서한에는 전쟁터에서 여성의 성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은 당연하지만, 옛 일본군만 특별히

비난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담기며,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를 조사했는지를 묻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결의안을 위안부 피해자를 ‘옛 일본군에 유괴돼 강제로 성 노예가 된 추정 인원 20만 명 규모의 아시아 및 태평양 섬의 여성이나 소녀’라고 표현하고 소녀상 설치에 샌프란시스코 시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짐.

■ 무라야마 前총리, “아베, 역사 인정하고 철저히 사죄하라”(8/11, 연합뉴스)

-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전 총리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 “일본이 과거 악행으로 아시아 각국 인민들에게 저질렀던 엄청난 재난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함.
- 무라야마는 자신의 담화가 역사문제에 대해 ‘정론’을 제시했고 역대 총리들이 모두 계승해왔으며, 만약 아베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침략’, ‘식민지 통치’, ‘반성’, ‘사죄’ 등의 표현을 담지 않는다면 아베 담화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나는 권력을 남용해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안보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

■ 아베담화 ‘과거형 사죄’…“차세대에 사죄 숙명 지워선 안돼”(8/14,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이하 담화)에서 전쟁에 대해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데 그쳤고, 전후 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정해서 거론하지 않음.
-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겼다”며 “그 전쟁과 어떠한 관여도 없다”고 밝힌 뒤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함.
- 또한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을 뿐, 이를 일본의 해동으로 명시하지 않음.
- 담화는 또 “우리는 20세기에 전시 하에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누가’ 상처를 입었는지 거론하지 않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음.
- 이번 아베 담화는 관심을 모았던 무라야마 담화(전후 50년 담화)의 4개 핵심 키워드(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를 모두 거론은 했지만, 실제 내용은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 외신, 아베담화 “불충분한 사죄”...“차세대 사죄 불필요” 주목(8/14, 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외신들은 대체로 충분하지도, 새롭지 못한 사죄였다며 한국과 중국 등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함.
- AP 통신은 아베 총리의 담화가 “불충분한 사죄에 그쳤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WP)는 “사죄라는 표현을 명백하게 반복하는 것을 회피했다”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피해 여성’이라고만 말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비판함.
- 뉴욕타임스(NYT), 美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 등도 사죄 표현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으며, 프랑스 르몽드도 아베 총리가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의 사죄를 수용했을 뿐 직접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적음.
- BBC 방송 역시 아베 발언들 가운데 미래 세대는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아베가 한국과 중국 등을 화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왔다고 덧붙임.

■ 작년엔 北·日에 협력제안...올해는 “기회 있다” 행동촉구(8/1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새롭고 진전된 내용의 대화·협력 제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북한과 일본을 향해 “기회가 열려있으니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함.
- 이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과거형 사죄’를 담은 아베 담화 등 최근 정세를 감안해 새로운 내용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북한과 일본의 행동과 실천을 촉구해 대북·대일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과물로 해석됨.

- 대신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강력히 비판면서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함.
 - '무늬만 사죄'라는 비판을 받는 아베 담화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촉구함.
- **日왕 '깊은반성' 추도식 첫 언급, 아베 총리 '가해·반성' 3년째 생략(8/15, 연합뉴스)**
 -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맞아 아키히토(明仁) 日왕이 전쟁에 대해 추도식에서는 처음으로 '깊은 반성'을 언급한 반면, 아베 총리는 역대 총리가 패전일에 얘기해 온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가해와 반성의 뜻을 3년째 생략함.
 - 그는 "여기서 과거를 돌아보고 앞선 대전(大戦)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 국민과 함께, 싸움터에서 죽고 전화(戰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추도의 뜻을 표명하며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함.
 - 일본 언론은 아키히토 일왕이 추도식에서 전쟁에 관해 '깊은 반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고, 추도식의 발언 문안을 아키히토 일왕이 직접 썼으며 근래에서는 전년도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쓰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내용에 변화를 줬다고 분석함.
 - **日언론, "관계개선 의식한 박대통령 경축사...정상회담 기대"(8/15, 연합뉴스)**
 - 日언론은 한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쏟아진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아쉬움을 거론하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이 일한관계의 시금석으로 여겨온 아베 담화에 일정한 평가를 보임으로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진행할 전망이 강해졌다"고 적음.
 - 통신은 이어 "아베 정권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낌'을 받았다"며 "일본에서는 정상회담 실현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임.

- **日여론조사서 아베담화 긍정적 평가 우세(8/15, 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한 교도통신의 일본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쪽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도통신이 14~15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담화를 ‘평가한다(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는 답은 44.2%,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은 37%으로 나타남.
 - 아베 담화가 지난 전쟁에 대한 ‘사죄’를 거론하는 한편, 차세대에 계속 사죄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 사죄의 표현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적절하다’가 42.7%, ‘적절치 않다’가 23.6%, ‘사죄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가 24.2%로 각각 집계됨.

- **아베 총리, 70년 담화로 묘수됐나…매파·비둘기파 日여론까지 호응(8/16,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를 ‘묘수(妙手)’로 삼아 난국을 풀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데, 일본 여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아베 총리의 담화에 모두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분석임.
 - 아베 정치에 대한 ‘제동장치’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고 앞으로 흔들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각의 결정했다. 총리의 강한 책임감과 의지가 표현됐다”고 말함.
 - 자민당 내 비둘기파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은 앞서 “각국, 각 방면을 배려하면서 일본이 취해야 할 모습을 명쾌하게 말했다. 훌륭한 담화”라는 반응을 내놓음.
 - 자민당 내 매파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일본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고 미래에 긴 세월동안 사죄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족책임론에서 자손 대를 해방해 나가겠다. 미래 지향형의 담화였다”고 평가함.
 - 연립여당이나 온건파는 사죄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과 역대 내각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주로 평가하고, 강경파는 사죄의 숙명을 끝내도록 하겠다는 점에 주목해 동상이몽(同牀異夢)으로 볼 수 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美 방송, 中 해커들 美 고위관리 개인 이메일 해킹(8/11, 연합뉴스)
 - 美 N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침투했다고 전함.
 - 이 관리는 “국가안보 및 무역 관련 모든 고위 관리들의 이메일이 공격 대상이 됐다”면서 “특히 해커들은 해당 고위 관리들의 정보뿐 아니라 이들 관리와 연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하고자 ‘이메일 주소록’도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NBC 방송은 이번 해킹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커에 노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함.
 -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시절 관용 계정 대신 뉴욕 자택에 서버를 둔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특히 그의 개인 이메일 가운데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발견되어 美 연방수사국(FBI)이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임.

- 中언론, 美고위관리 이메일 해킹 의혹에 “사실무근”(8/11, 오전12시, 연합뉴스)
 - 중국은 최근 미국 내에서 미 고위 관리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에 노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함.
 -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 소속 대변인은 이번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중국은 그 어떤 형식의 인터넷 해킹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힘.
 - 또 미국의 ‘마이크 외교(일방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의 외교)’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비판함.
 - 美 N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침투했다고 전했으며, 구글을 포함해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이메일 계정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 中위안화 평가절하에 美의회 ‘환율조작국 응징법’ 재점화(8/12, 연합뉴스)
 - 중국이 전격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환율조작국 응징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최대한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美행정부와 달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환율조작’이라고 단정하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음.

- 美의회의 논의 방향은 크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계해 환율조작 대처 방안을 마련하거나 미 의회에 계류된 환율조작과 관련하여 별도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 두 갈래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강경파는 이미 중국의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를 앞세워 아예 TPP 협상과 환율조작국 대처 방안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음.

■ ‘시진핑 주석 최대 이벤트’ 열병식 D-18…中 ‘군사굴기’ 박차(8/16, 연합뉴스)

- 중국은 9월 3일 ‘중국인의 항일전쟁 승리 및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시진핑 체제의 최대 이벤트로 삼고 거침없는 ‘군사굴기(軍事굴<山+屈>起·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 행보를 연출함.
- 중국의 이번 열병식은 신중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거행되는 국경절 외 열병식이며, 중국방부는 이미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전략미사일 부대의 열병식 참가와 일부 신형무기 공개 등을 확인하며 이번 열병식이 급성장한 중국군의 모습을 과시하는 무대가 될 것임을 예고함.
- 이번 이벤트는 시 주석의 ‘대국굴기(大國崛起·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 대외정책 과도 맞닿아 있으며, 특히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이 미국, 일본과 한참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美·中, 시진핑 주석 방미 앞두고 인권문제 날 세워(8/16, 연합뉴스)

- 미·중 양국은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톰 말리노프스키 美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와 리권화(李軍華) 中외교부 국제사(司) 사장을 수석대표로 제19차 중·미 인권대화를 개최함.
- 미국 측 고위 관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250명 이상의 인권변호사들을 체포해 일부를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며 반체제 인사 탄압을 문제 삼음.
- 중국 측 수석대표인 리 사장은 이에 대해 “미국이 수치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을 향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사항’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 것, 인권 문제의 정치화, ‘마이크로폰 외교(폭로적인 선동적 외교)’ 등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함.
- 이번 대화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시 주석의 취임 후 첫 미국 국민 방문을 앞두고

열린 것으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됨.

바. 미·일 관계

- 백악관, “日, 모든 국가의 모델” 아베담화 환영…도 넘은 日감싸기(8/15, 연합뉴스)
 -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美백악관은 ‘환영의 입장’을 내 확연한 대조를 보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가한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deep remorse)’를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전 정부의 역사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약속 역시 환영한다”고 밝힘.
 -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앞으로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확약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으며 이런 기록은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덧붙임.
 - 백악관의 이 같은 환영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급부상 속에 ‘안보’와 ‘경제’의 양대 축을 일본에 기대야 하는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일본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美 하원 외교위원장, “아베담화 실망·유감”…전문가들도 비판(8/15, 연합뉴스)
 - 직접적인 사죄나 반성이 없는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역사학자들까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미 상·하원 합동연설 때보다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용어로 역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마지막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실망과 유감의 입장을 밝힘.
 - 마이크 혼다 美연방 하원의원도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아베 총리의 담화는 그들의 의지에 반해 일본군의 성 노예를 강요당한 20만 명의 ‘위안부’들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데 크게 못 미쳤다”며 “이는 일본군에 고통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direct affront)’”이라고 성토했.

-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아베 총리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는 역사학자들의 집단성명을 주도한 美 코네티컷 대학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 등 미국 내 역사학자들도 아베 담화에 ‘사죄’라는 핵심 단어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꼬집음.

- 美, “일본에 원자폭탄 12발 추가 투하할 계획이었다”(8/15, 연합뉴스)
 - 미국은 일본이 1945년 8월 1일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투하 결정 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외에도 교토, 요코하마, 고쿠라, 니가타, 도쿄 등에 훨씬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원폭 12발을 추가로 투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 일본 본토로의 침공 계획을 부추기려고 남부 지역이 원폭 투하 지역으로 최우선으로 선택되었으나, 헨리 스티븐 육군장관이 교토가 중요한 문화 중심이므로 폭격 대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히로시마가 대신 선택되었는데, 히로시마는 육군의 주요 병참기지가 있는 데다 대표적인 병력 출항지이기도 했음.
 - 태평양 상의 티니안 섬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B-29 폭격기들의 발진기지였는데, 플루토늄 원폭인 ‘도쿄 조’는 두 번째 표적인 고쿠라에 투하될 계획이었으나 티니안 섬으로 플루토늄이 반입되는 도중인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소식이 들려와 추가 원폭 투하 계획은 백지화함.

사. 미·러 관계

- 美·中·러, 상대국 군사위성 무력화 기술 개발 전쟁(8/12, 연합뉴스)
 -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이 상대국 군사 위성들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지상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주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전함.
 - 군사용 위성 무력화는 유사시 위성에 의존한 지상의 수많은 무기 체계들을 무력화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지구 상공에서 위성들을 겨냥한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자체적인 프로그램들로 군사 위성 분야 주도권을 쥔 미국에 도전하고 있음.
 - 美국가정보국(NI)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올해 초 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미국 위성의) 접근을 제한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중국이 미국 위성을 “방해하고, 해를 입히고, 파괴하려는 욕구를 보여줬다”고 강조함.

- 그의 발언은 2007년 시작된 중국의 일련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 이란 軍 실력자 방러에 미국, “유엔 제재위반” 반발(8/13, 연합뉴스)

- 이란군의 실력자로 꼽히는 카심 솔레이마니 소장의 러시아 방문 소식에 미국 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됨.

- 美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우리는 (솔레이마니의) 이번 방문에 대해 러시아 외교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다룰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방러는 핵협상 타결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폭을 넓히게 된 이란이 러시아와 유착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어서 美의회의 핵협상 합의안 승인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란과 러시아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시리아 분쟁과 관련해 미국과 충돌할 우려도 제기됨.

■ 美국무부, “러 첨단 순항미사일 개발해 시험…INF 위반”(8/13, 연합뉴스)

- 美국무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첨단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발사 시험을 했으며 이는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한 외교·경제·군사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INF 조약의 금지 대상이 되는 지상 배치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 미사일은 첨단 기술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일본·한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에서 시험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주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일축하면서 “러시아도 INF 조약 위반과 관련해 미국에 불만이 많다”고 반박함.

아. 중·일 관계

- 中, 항일부대 기록문서 첫 공개…대일공세 강화(8/10, 연합뉴스)
 - 신화통신은 중국 제2역사당안관(기록물보관소)이 최근 중일전쟁 시기 항일전의 최전선을 담당했던 팔로군, 신사군 관련 사료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을 계기로 편성된 팔로군, 신사군은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산하 부대면서 형식적으로는 국민당 지휘를 받았다고 전함.
 - 공개된 사료 중에는 중국이 항전 기간에 처음으로 승리한 ‘핑싱관(平型關) 대첩’, 신사군이 거둔 첫 승전인 ‘웨이깡(韋崗) 전투’에 관한 전황보고서, 기록사진이 포함됐으며, 중국 항전부대 소속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힘을 합쳐 일본군 점령지역에 위치한 철로를 파괴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됨.
 - 신화통신은 특히 “민족이 위기에 닥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은 서로 손을 잡고 전장으로 뛰어갔다”며 항일전쟁 과정에서의 국민당 역할을 부각하기도 함.

- 中, 日전범자백서 또 공개…“6세 아이 돌로 찍어 살해” (8/11, 연합뉴스)
 - 중국국가당안국(기록물보관소)는 이날부터 일제 전범들의 자백서를 하루 한 편씩 모두 31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제1편으로 공개된 것은 전범 스기시타 켄조의 자백서로 “중국인을 증오하는 마음’과 ‘상부의 명령’ 때문에 100명을 참살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으며, 그 이후 “상하이 푸단대학 인근에서 7살 정도 된 아이를 돌로 찍어 살해한 뒤 시신을 강물에 던졌다”, “난을 피해 도망가는 6살 정도 된 아이를 붙잡아 돌로 찍어 살해했다”, “17세 여성을 총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우물 등에 21차례 세균을 뿌렸다”는 등의 범행들을 자백함.
 - 중국 국가당안국은 지난해 7~8월에도 일제 전범들의 서면 자백서 45편을 한 달여 간에 걸쳐 공개한 바 있으며, 중국이 보유한 일본 전범의 ‘서면 자백서’는 모두 20만쪽 분량에 이르며 현재 정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

- 中, 아베담화 압박·열병식 띄우기…ICBM 시험발사까지(8/11, 연합뉴스)
 - ‘아베 담화’ 발표에 앞서 중국은 사실상 일본에 대한 역사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는데, 다수의 중국 관영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아베 총리를 향해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 기록물보관소 등은 전범 자백서 등

일제의 전쟁범죄 증거물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중국군이 최근 또다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주목받는 동풍(東風)-41을 시험발사했다고 중국 참고소식(參考消息) 인터넷판이 보도했으며, 이는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열병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을 것이라는 분석임.
- 이와 더불어 중국군은 최근 개최한 열병식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략미사일 운용 부대인 제2포병의 열병식 참가를 확인하며 중국군의 새로운 핵전력을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함.

■ 中, 日전범자백서 제2편…“포로 10여 명 생체실험”(8/12, 연합뉴스)

-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앞두고 일제 전범들의 범죄 자백서를 추가로 공개하며 역사 공세를 이어갔는데, 중국가당안국(기록물보관소)은 지난 1942년부터 중일 전쟁에 참가한 전범 유아사 켄의 자백서를 공개함.
-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그는 이 자백서에서 1942년 3월 산시(山西)성 루안(潞安) 육군병원에서 진행된 포로 생체 해부 연습에 참가해 다량의 마취제를 인체에 투입해 포로가 사망하는지를 시험했다고 진술함.
- 이 전범은 “1944년 4월 루안 육군병원에서 포로 2명을 군의관들에게 수술연습 재료로 제공했다”, “1944년 9월 압송된 2명의 포로 중 한 명은 군의관들에게 수술 재료로 제공했고, 다른 한 명은 원장에게 제공했는데 참살됐다”고 진술함.

■ 中 전범자백서 제3편, “고문·살해·생체실험”…아베 총리 정조준(8/13, 연합뉴스)

- 중국이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일제전범 자백서 제3편을 공개하고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죄를 촉구함.
- 중국가당안국(기록물보관소)은 이날 1940년 중일전쟁에 참가해 1945년 패전과 함께 포로로 잡혔던 미우라 요시오의 자백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자백서에 따르면, 그는 1941년 9월 “약탈한 무기를 숨기기 위해” 농민 두 명을 살해함.
- 환구시보는 “아베 담화에서 분명한 사죄의 언어로 일본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침략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함.
- 지난해 7~8월에도 전범자백서 45편을 한 달여간에 걸쳐 공개한 중국이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다시 전범자백서 공개에 나선 것은 과거사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중외교부, “日, 군국주의 침략전쟁 진정한 사죄하라”(8/15, 연합뉴스)**
 - 中외교부는 14일 아베 담화와 관련, 공식 논평을 통해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일본에 촉구하고, 이어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중국주재 일본대사에게 아베 담화와 관련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발동한 침략전쟁은 중국 및 아시아 피해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왔으며 과거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일본과 아시아 주변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미래를 여는 전제라고 밝힘.
 - 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념하는 2차대전 승리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일본은 마땅히 군국주의 침략의 성격과 전쟁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하며, 피해 국민들에게 성실하고 진정한 사죄를 하고, 철저히 군국주의 침략역사와 결별해야한다고 지적함.

- **필리핀 정부, 아베 담화 환영...일본과 밀착 행보(8/16, 연합뉴스)**
 - 필리핀은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종전 이후 일본의 행보를 호평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본과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음.
 -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과 일본의 관계는 많은 분야에서 신뢰와 끊임없는 지원으로 특징지어진다”며 “전후 70년은 끈질긴 노력으로 양국 국민이 과거 문제들을 극복하고 돈독한 우정을 쌓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밝힘.
 - 필리핀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적국이던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자국의 2대 경제·군사 후원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됨.

- **中, “일본군, 중국서 위안부 살해해 인육 먹어”...역사 총공세(8/16,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것은 물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반(反)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사료들을 대거 공개함.
 - 중국가당안국(기록물 보관소)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당안선(選)’이란 제목으로 매일 1세트씩 8일 동안 위안부와 관련된 사진과 문서, 영상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15일에 올린 자료에는 당시 일본

군 하사관이 자신의 위안부로 삼은 여성을 살해해 그 인육을 군인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담김.

- 중국의 이 같은 일제전범 자백서 공개는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9월 3일)을 전후해 중국이 일본을 향해 ‘역사 총공세’에 나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자. 중·러 관계

- 러시아, 텐진항 폭발사고 중국에 인도주의 지원 제안(8/14,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치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텐진항 물류창고 대형 폭발 사고를 당한 중국 측에 전문을 보내 구조대원 파견 등의 지원을 제안했다고 비상사태부 공보실은 밝혔다.
 - 푸치코프 장관은 “중국 측과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지원은 양국 간에 체결된 비상사태 조기 종료 및 수습 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필요한 장비를 갖춘 러시아의 특수사고구조팀이 대기 상태에 있으며 어떤 지원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 근년 들어 중국과 유례없는 밀월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러시아는 사고 직후 바로 중국에 지원을 제안함.

차. 일·러 관계

- 러시아-일본, 러 부총리 쿠릴열도 방문 사고 신경전(8/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대표가 자국 애국 청년 조직의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쿠릴열도 4개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한 데 대해 항의함.
 - 일본은 메드베데프 총리가 실제로 쿠릴열도를 방문할 경우 다음 달 초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자국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짐.
 - 러시아는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정부 인사가 자주 방문함으로써 실효 지배중인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러시아의 속내를 읽고 있는 일본은 러시아 인사의 열도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미 전역에서 중 강제복송 중지 촉구”(8/1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중국의 유엔 난민지위협약 가입일인 9월 24일에 ‘탈북자 구출의 날’(Save North Korea Refugee Day) 행사를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 이번 전국적 행사를 통해, 중국 정부에 유엔 협약에 따라 탈북자 복송 중지를 촉구할 것이라는 설명임.
 - 또 수잔 솔티 대표는 이날 저녁 워싱턴 디씨에서 세계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북한 인권을 위한 촛불 집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편 북한자유연합은 온라인상에서 북한제재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난 6월에 시작한 이후 2개월 만에 이미 1천400명의 미국 시민들이 온라인 청원에 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 미국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참여로 북한자유연합은 지난달 미국 상원을 방문해 상원 의원 전체에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설명임.
 - 앞서 북한 자유연합은 지난 6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월 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이행법안이 상원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 “미 정부의 대북 지원 변화 유도 실패”(8/1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토(CATO)연구소의 덕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10일 온라인 미국 정책 간행물인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원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들은 올해 북한이 100년만에 큰 가뭄을 겪은 데다 최근 홍수로 곡물 수확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반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미국은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북한의 개혁과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원조를 활용했지만 결국 이 정책은 북한의 어떠한 변화도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특히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이제껏 해오던 것처럼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차원의’(private) 지원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외부의 원조 없이는 붕괴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언제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해왔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미국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욱 냉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에 지원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원조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배 감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 사회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의 원조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강조했다.
 - 한편 유엔은 11일 북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3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4천 헥타르가 침수됐다면서, 홍수로 21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음.
- 독일 민간단체, 평양서 ‘국제 농아모임’ 개최(8/13, 미국의소리)
 -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이 주최하는 ‘제7회 국제 농아모임’이 8월 7일부터 닷새 동안 평양에서 열렸다.
 - 세계농아인연맹(WFD)의 북한 연락관인 로버트 그룬드 북한 담당관은 이번 국제 농아모임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이같이 밝혔다.
 - 올해 모임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에서 농아 15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농아인 30여 명도 참석했다.
 - 이들은 평양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에 새로 개설된 농아센터를 방문하고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일하는 이발소도 방문했다.
 - 또 북한 내 청각장애인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했다고 그룬드 담당관은 밝혔다.
 - 그룬드 대표는 북한 농아들에게 전세계 농아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굿 펠로쉽(Good Fellowship)’이란 이름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국제 농아모임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백36명의 농아들이 참가했다.
 -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함흥은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음.
- 영국 외교부, 북한 주민 대상 ‘쉐브닝’ 장학생 모집(8/13, 연합뉴스)
 - 영국 외교부가 북한 주민도 지원할 수 있는 내년도 ‘쉐브닝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보도했음.
 - 2016~2017년도 ‘쉐브닝 장학생’은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1천500여 명을 선발하며 올해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음.
 - 선발되면 내년 9월부터 영국 유명 대학에서 1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하며 학비와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음.
 - 이 장학생에 뽑힌 북한 주민은 지금까지 4명으로, 2011~2012년도 장학생에 북한 국가과학원 출신 김경민 씨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출신 김지현 씨가 뽑혀 케임브리지대에서 각각 국제법과 교육학을 전공했고, 2014~2015년도에는 평양과학기술대 출신인 배룡혁 씨와 리춘성 씨가 선발됐음.
 - 영국 외교부는 최근 2015~2016년도에도 북한 주민 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음.
 - 그동안 한국인은 1천100여 명이 이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서 공부했음.
 - 영국 외교부는 2011년부터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장학생도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세혁 씨 등 3명의 탈북자가 석사 과정을 마쳤음.
 - 영국 외교부장관의 관저 명칭을 딴 쉐브닝 장학금은 1983년 시작됐고 그동안 전 세계에서 4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음.
- 북, 불법 휴대전화 감시 강화(8/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연선 주민들의 불법휴대전화 사용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는 소식임.
 - 이 같은 사실은 북한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현지 중국 주민들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8일부터 전파통제가 매우 강화됐다”며 “휴대전화 감시 장비들이 시내(도심) 곳곳에 배치된 데다 방해전파도 너무 심해 당분간 전화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음.

- 북한은 6월말부터 국경연선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검열대를 파견해 현지 주민들의 밀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 하지만 ‘전승기념일’인 7.27을 앞두고 검열성원들이 철수하면서 밀수가 재개될 조짐이 컸다고 그는 설명했다.
- 특히 소식통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검열’로 밀수까지 중단됐을 때에도 전과통제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 불법휴대전화 사용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며 지금의 전과통제는 지난 5월에 실시됐던 불법휴대전화 단속 수준이라고 언급했음.
- 이와 관련 12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불법휴대전화 감시를 위해 국내 손전화 기지국의 가동을 임시적으로 중단했다”며 “합법적인 국내 휴대전화 기지국의 가동까지 중단돼 주민들은 ‘또 누군가 큰 인물이 처형된 것 아니냐’며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음.
- 한편 북한이 불법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했음은 한국의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한 탈북자는 “국경경비대원들조차 별별 떨고 있다”고 요즘 시작된 북한의 불법휴대전화 단속실태를 전했다.
- 북·중 국경연선에 살면서 북한 현지 주민들과 자주 연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한 소식통도 “압록강 변에 올라서면 북한의 전과감시 차량들이 다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보통 단속은 보름정도 계속 된다”고 강조했다.

2. 북한인권

- 유엔 인권이사회 내달 21일 북한인권 토론회(8/11,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21일 북한인권 관련 패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음.
 - 이번 토론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 일정 가운데 하나로 열리는 것임.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행사가 아닌 본회기 내 공식 일정으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는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등이 논의됨.
- 각국 외교관 ‘북 인권’ 압박 논의(8/11,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기반을 둔 북한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는 다음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외교관들을 초대해 유럽연합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이 단체의 펠리시티 스펜서-스미스(Felicity Spencer-Smith) 공보담당은 유엔 북한인권 보편적정례검토(UPR)를 통한 대북 관여(Engaging North Korea Using the UPR) 등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 이행 방안이 토론회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단체가 지난 3월 발표한 ‘보편적정례검토를 활용한 대북 관여’와 몇 주 후에 발표될 예정인 ‘대북 접촉 단체 발족’ 등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회임.
 - 스펜서-스미스 공보담당은 지난해 두 번째 보편적정례검토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 중 113건을 북한이 인정한 것은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참혹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북한 당국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또한 북한 사회도 국가보다 장마당에 의존하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따라서 유럽연합은 이 같은 현상을 토대로 북한이 보편적정례검토에서 수용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임.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 서울사무소가 한국에 설립되었지만 또 다른 권고 내용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컨택 그룹’, 즉 ‘접촉단체’는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스펜서-스미스 공보담당은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구체적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접촉단체’ 결성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 ARF 의장성명 “北, 도발 자제하고 인권문제 해결을”(8/11, 조선닷컴)
-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 북한이 참석한 ARF 회의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나온 것은 이례적임.
 - 10일 공개된 의장성명의 한반도 관련 조항은 “장관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떠한 비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며,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되어 있음.

- 이어 “인도적 우려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표현도 담겼고, 여기서 ‘비생산적 행동’과 ‘인도적 우려’는 각각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를 가리킴.
 -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 온정적인 아세안뿐 아니라 북한도 참석한 ARF 회의에서 북한을 적시해 유엔 결의 준수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뤄진 것 자체가 뜻밖”이라고 말했음.
 - 앞서 채택된 제48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 등에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등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됐음.
- 호주서 제2차 북한인권주간 행사 17일 개막(8/11, 연합뉴스)
 - 호주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한 제2차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림.
 - NGO인 북한인권개선호주운동본부(대표 김태현)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드니 한인회와 시드니교역자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후원함.
 - 올해 행사는 행사 첫날 시드니 도심의 이벤트 시네마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탈북민의 시드니공대(UTS) 강연(17일), 북한인권영화 ‘크로싱’ 상영(17·21일),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공연 및 강연(18·20일) 등으로 짜여졌음.
 - 또 19일 수도 캔버라 연방의회에서는 탈북민 공청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탈북민의 강연 후 연방의원들이 질의에 참여하게 됨.
 - 김태현 대표는 “북한의 실상을 호주 주류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행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인권국제의원연맹 오스트리아 빈서 국제사회 공조 모색(8/12, 연합뉴스)
 -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북한인권국제의원연맹·IPCNKR)은 1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12차 연례 총회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가속에 나섰음.
 - 올해 총회에는 한국에서 황우여, 홍일표, 이노근, 함진규, 김춘진, 황영철, 김동완 의원 등 7명이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오스트리아(8명), 루마니아(5명), 영국, 캐나다, 일본, 지부티, 체코 등 모두 8국에서 의원 28명이 함께할 예정임.
 - 참석 의원들은 이날 총회 등록과 만찬 회합에 이어 13일 총회 본회의와 세션 토의를 하고 나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방침임.

- 참석자들은 탈북 난민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경험, 서울거주 탈북자들의 삶의 질 향상, 북한정권에 의한 외국인 납치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주제 삼아 3개 세션을 가동하고 자유토론을 거쳐 공동선언문을 다듬기로 했음.
 - 이번 총회에는 특히 북한인권 개선활동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소장 이한별)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박정옥(60·함흥)씨와 함께 참석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증언할 계획임.
 - 박 씨는 탈북 후 두 차례 강제북송을 당하고서 북한보위부 조사, 그리고 집결소, 구류장, 단련대 등 수감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다른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목격했음.
 - 박 씨는 총회 세션에 앞선 증언에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임신부여성의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같은 끔찍한 북한인권 현실을 전하고 유럽의회를 비롯한 각국 의회가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에 나서줄 것을 호소함.
 - 이와 별도로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IPCNKR 회원국들이 각국 의회에서 북한의 강제구금 시설인 정치범 수용소 철폐, 기독교인 종교박해 중지, 중국에서 강제송환 당한 탈북난민들의 피해방지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또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정의연대 회원들은 IPCNKR 회의장에서 북한인권 실태 그림을 전시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빈 시내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거리캠페인에도 나섬.
- 대학생들, 폭염에도 전국 누비며 北인권 현실 알려(8/13, 데일리NK)
-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대표 문동희)가 주최한 ‘대학생 북한인권 개선 전국투어 캠페인’이 지난 3일 춘천에서 시작해 13일 서울 대학로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바라는 대학생 퍼포먼스와 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종료됐음.
 - 전국 33개 북한인권 동아리 및 청년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11일 간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진행한 캠페인은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음.
 -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단은 북한인권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글 카드보드를 활용한 3D 북한인권 영상 상영, 얼음물 기부 캠페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 캠페인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대학생 전현주(23)씨는 “많은 시민들이 북한인권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걸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특히 이번 캠페인은 서울 대학로와 부산 BIFF거리(부산국제영화제 기념 거리), 대구 동성로 등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심가에서 진행돼 시민들의 참여율도 지난 캠페인보다 훨씬 높았음.
- 한편 대학생과 청년층이 주도해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설치된 데 이어, 다음달 21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에 관한 패널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시돼 의미를 더했음.

3. 탈북자

- 영국 탈북 2세 “무국적 이동 지원하고파”(8/12,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최근 개인 기부자들의 기금으로 시작된 차세대 탈북자 양성 프로그램 ‘피닉스’의 첫 참가자 16세 탈북2세 용 준 군과의 회견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11일 공개했음.
 - 유럽북한인권협회에서 유급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탈북2세 용 준 군은 “중국에서 태어나 9살에 영국으로 왔다”면서 “중국에서 (국적 없는) 북한 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았다”고 전했음.
 - 이런 이유로 그는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적 없는 아이들이 처한 곤경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음.
 - 이어 그는 “부모님들을 보면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얼마나 영국 등 타지 정착이 힘든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탈북자들을 위한 영어교육이 영국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럽북한인권협회의 펠리시티 스펜서-스미스(Felicity Spencer-Smith) 공보담당은 용준 군이 7년 전 영국에 정착해 영어가 능통하다며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기대를 나타냈음.
 - 용 준 군은 유럽북한인권협회에서 한 시간에 약 14달러를 받으며 유급 인턴으로 경력을 쌓게 될 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 그리고 직업 탐색 등에 대해 배울 예정임.

4. 이산가족

- 정부, 다음달 중순까지 이산가족 6만 여명 명단 완성...추석 전 북측 전달(8/16, 자유아시아방송)
 - 통일부는 남한 이산가족 6만 여명의 현황을 내달 중순까지 파악해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임.
 - 16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올해 7월 31일 까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국내외 인사는 12만9천698명으로 집계됐음.
 - 올해 6월말까지 정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드러난 사람은 6만3천 406명(48.9%)으로 전체 등록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며, 생존자 6만6천292명도 절반 이상(54.3%·3만5천997명)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
 - 통일부 관계자는 “매년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2월부터 중단된 상태”라면서 “남북의 이산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생사를 확인해 가능한 분은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 그는 “남한 이산가족 6만 여명 전원을 상대로 한꺼번에 본인 확인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한적십자의 도움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1천명 정도 동원하면 이르면 보름 정도면 전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조사 과정에서 본인 개인정보를 북측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이산가족의 경우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됨.
 - 통일부는 “검증 작업까지 명단 완성에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정부는 올해 추석 전후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음.
 - 다만 우리 정부가 수차례 북측에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수사·정례 상봉을 요구했을 때 북측이 응하지 않았던 전례와, 북측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이산가족 상봉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명단 전달 시점은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음.
 - 이날 오전 MBC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명단 전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우선 실무절차를 밟아야 하고, 북측이 받아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음.

- 홍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다른 정치적 문제와 연관되지 말고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물론 잘못된 것은 짚어가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핀란드 NGO, 6년간 대북 치과지원(8/12, 자유아시아방송)
 -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는 치과 치료와 농업 기술 지원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한나 호카넨 동아시아담당 국장은 지난 주 대북 의료지원 성과를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본화면에 소개했다면서 5건의 개발지원 중 의료 지원이 3건, 식량 관련 사업이 2건이라고 설명했다.
 - 유럽연합의 자금지원으로 강원도 세포군에서 진행 중인 식량안보개발사업에 배정된 126만 유로, 미화 141만 달러를 비롯해 2018년까지 5개 지원 사업에 총 182만 달러의 예산이 든다고 덧붙였다.
 - 호카넨 국장은 2009년에 시작한 치과 지원의 성과를 이 단체의 후원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 소개했다면서 6년 동안 북한의 치과 의사와 보육원 교사 등 260여 명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의사와 교사 등 보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법과 치아 관리법을 교육하고 양치 도구를 지원하면서 치아 건강과 관련한 인식이 평양과 가까운 다른 도시와 지역에도 전파되는 파급효과가 컸다는 평가임.
 - 호카넨 국장은 북한 어린이 6만 5천여 명이 이를 닦을 수 있는 칫솔과 치약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 핀란드개발협력기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만 유로, 미화 11만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 주민의 치아 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북한 대학생의 핀란드 유학 등 학술 교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밖에 강원도 세포군의 보건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6만 3천 유로, 미화 7만 1천 달러를 지원하고 평안북도와 강원도의 4개 지역에 약 12만 유로, 미화 13만 달러 규모의 병원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유엔, 하반기 대북 긴급구호기금 630만 달러 지원(8/13, 미국의소리)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 가뭄과 홍수 피해에 대응해 6백3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12일 발표한 북한 가뭄 현황자료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이 같은 규모의 긴급대응 지원금(Rapid Response Window)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자금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긴급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6백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것임.
 -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총 8백30만 달러에 달함.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상반기 북한에 6백5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었음.
 - '긴급대응 지원금'은 심각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지원되며, '자금부족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과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12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긴급대응 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되었음.
 - 총 2백75만 달러(\$2,753,917)로 식량과 식수, 위생 분야에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 하도록 했음.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앞서 130만 달러를 유니세프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추가로 150만 달러(\$1,458,949)를 지원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 영양 관련 지원을 하도록 했음.
 - 또 세계식량계획 WFP에 3백만 달러(\$3,070,643)를 지원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취약계층과 수재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토록 했음.

-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에 45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주민 1천1백만여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음.
-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추가로 지원받는 긴급자금은 가뭄 피해 뿐 아니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폭우에 따른 홍수로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으며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천 헥타르가 유실됐음.
- 한편 국제적십자사 IFRC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서 최근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 성명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유엔의 발표와 같지만 가옥 1천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 조선적십자회 이호림 사무총장은 국제적십자사에 “현재 식수와 긴급 대피소, 의복,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 북한 담당관은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국제적십자사는 수해 지역에 천막과 방수포, 조리기구, 물통,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등을 지원할 예정임.

8. 북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